특별사법경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방사범 수사 역량 강화 연구

A Study on the Reinforcing Investigation Ability of the Fire Crim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전종정*

Jeon, Jong Jung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professionalism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deal with fire crimes. The analysi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 is follow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precedent in GyeongGi-Do Fire Services and Ansan Fire Station in recent 5 years. Improvement on the problems of the recent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system which deals with fire crimes is proposed to develop the investigation officers education system, to enlarge the range of performance and to revise the regulations which establish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on the fire crime investigation to develop the professionalism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Key words :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 Mutual assistance system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영향력 있는 수사권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사법경찰제도의 의의 및 목적 등 일반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기도 소방사범처리 실적 및 최근 5년간 안산소방서 소방사범 처리현황을 통하여 현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를 분석한다. 현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으로 수사 교육의 내실화, 직무 범위 확대와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조 수사 체제를 확립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도모 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사법경찰제도, 공조 수사 체제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1.1 연구의 배경 및 방향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을 포함, 일반행정공무원의 신분에서 사법경찰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갈수록 그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특별시(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사경-145명 포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 내 ‘특별사법경찰지원과’라는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들어갔고,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도 2008년 이후 “특별사법경찰”을 지원하는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할 경우,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논의는 현재보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의 운영자체가 활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관심영역에 있어서도 다소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회일반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을 특별사법경찰관의 영향력 있는 수사권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1.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효과적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수사권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 및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및 제정 목적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학문적 측면, 일반론적 측면에서 한 번도 명확하게 정리되어진 적이 없는 특별사법경찰제의 법적개념, 목적, 성질 및 특성에 관한 일반론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경기도와 안산소방서의 소방사범 처리 실적 및 현황의 통계자료와 소방사범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제도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 실태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회원 · 전종정 경기대학교 도시방재학부 박사과정(E-mail : jijong@gg.gr.kr)

1.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관

1.2.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행정기관(소방서포함)에 근무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소방공무원에게 범죄의 수사 및 증거의 수집·확보를 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고도화, 지능화, 광역화, 전문화되는 현대 사회의 범죄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기 힘든 개별법영역의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고 그 직무에 관한 범위를 설정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설치에 관한 최상위의 법률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서를 포함한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해서는 수사작용으로서 형사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197조¹⁾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한 개별 법률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다. (제5조 12호²⁾, 제6조 10호³⁾)

1.2.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목적 및 성격

소방, 환경, 산림, 조세 등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죄사건을 일반 경찰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에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심히 곤란하다. 또한 일반 경찰관(리)은 그 수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행정 분야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그 부분의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이들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하여 특수행정분야를 직접 담당하는 정통한 공무원으로 이를 처리케 하여 범죄수사에 효율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이중적으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활동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발생 후인 사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범죄의 발생 이전의 사전적 예방활동 또한 수사의 중요한 영역으로 존재한다고 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에 관한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경찰기관의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특별사법경찰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성격이 형사법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3 직무범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범위가 사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 형사소송법의 지위와 권한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동일하다. 즉,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 각 소속 직무와 관련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조사, 압수, 수색, 각종 영장 신청 등 사법경찰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사경법에 규정된 개별 행정영역의 직무에 관하여, 2008년 2월 29일 법률 8867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수사관할

직무범위 규정 계급	소방사법경찰관리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분석

2.1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소방사범 수사 사례 분석

2.1.1 경기도 소방사범 처리 실적⁴⁾

그림 1과 표 2에서 보듯이 2009년도 소방사범 사법처리 건수는 전체 138건이고, 소방관련 법규별로 살펴보면, 소방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 실적이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

그림 1. 2009년도 경기도 소방사범 법규별 사법처리현황

표 2. 2009년도 경기도 소방사범 법규별 사법처리 현황

계	138
소방기본법	7
소방시설공사업법	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57
위험물안전관리법	57

1)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2)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3)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4)소방방재청 소방제도와 “2010년 예방소방행정통계”에서 발췌한 현황

표 3. 2009년도 경기도 업종별 사법처리 현황

년도	계	관계자	방화 관리자	위험물 설치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	기타
2009년	138	45	20	36	4	9	4	0	18

그림 2. 2009년 기관별 특별사법경찰 검찰송치 실적

반자에 대한 처리 실적이 17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리 실적이 57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 실적이 57건으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처리실적과 함께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위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사범의 범죄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고 변화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방관계법이 다른 법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많아 관계자 등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지식부족이 문제점의 하나라고 분석된다.

표 3의 경기도 업종별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관계자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설치자가 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관계자 및 위험물설치자 등이 소방관련법의 전문성과 기술성 때문에 이해도와 관심이 부족한 것 이외에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대한 투자를 비용 측면으로만 고려하여,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소방시설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891개 공공기관 중에서 검찰송치 실적을 그룹별로 묶어보면, 1001건 이상의 송치실적은 24개 기관으로 전체에서 2.7%로 소수 비율을 차지했고, 10건 이하의 실적을 가진 기관은 444개로 전체에서 49.8%를 차지 높은 비율을 이루고 있다. 거의 과반수 기관 특별사법경찰의 검찰송치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문제점

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1.2 안산소방서 소방사범 처리 현황

표 4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안산소방서 소방사범 사법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 실적이 21건, 2006년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 실적이 1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7년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 실적이 31건으로 두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고, 2008년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 실적이 24건, 2009년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 실적이 19건이었다. 소방사범 업종별로 살펴보면, 방화관리자가 3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관계자, 위험물설치자가 각각 33, 29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4의 안산소방서의 소방사범 처리현황과 표 3의 2009년도 경기도 업종별 사법처리 현황과 비교하면, 소방사범 양태가 극히 단조로우면서 고질적인 면이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관계인 등이 직접적인 생산성이 없는 소방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단속을 피해가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인다.

경기도 및 안산소방서의 각종 통계자료 현황을 종합해보면 소방사범의 양태가 단조롭고 고질적임을 알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의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인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능력이 고도로 전문화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는데,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소방사범 수사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2.2 소방사범 수사 사례

2.2.1 불법 위험물 대형운반용기 적발에 따른 수사 처리(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2항⁵⁾ 위반)

가. 수사추진 현황

1) 사건의 발단

· 경기도방호예방과-4171(2008.03.26.)호와 관련 불법 위험물용기 사용업체 확인지시 공문 접수

표 4. 최근 5년간 소방사범 사법처리 현황

구분	계	관계자	방화 관리자	위험물 설치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	방염업	탱크 시험자	안전관리 대행기관	기타
계	110	33	38	29	9					1			
2005년	21	6	8	6	1								
2006년	15	4	6	4	1								
2007년	31	13	11	4	2					1			
2008년	24	6	7	8	3								
2009년	19	4	6	7	2								

5)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6.8.3., 2008.12.18.>

2) 수사경위

· 2008년 3월 29일 현지확인한 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번지 소재 (주)에서 사용중이던 기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 위험물 운반용기를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 착수

3) 수사결과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번지 고재 (주) 공장장 를 신문 조사한바 피의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제반 증빙서류 등으로 보아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위반 범증이 충분하므로 본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사건송치함.

나. 사건 수사추진 일정

- 2008. 4. 02. : (주) 공장장 ○○○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징구
- 2008. 4. 05. : 피의자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안산 단원경찰서)
- 2008. 4. 13. : 피의자 ○○○에 대한 신문
- 2008. 4. 25. : 수사결과보고
- 2008. 4. 25. : 의견서 작성(특별사법경찰관 김영선)
- 2008. 4. 25. :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사건송치

다. 수사결과와 분석·평가

1) 총평

· 약 150여 통이나 되는 불법 위험물 대형운반용기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대형 재난사고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는 바, 철저한 현장 확인과 신속한 수사 진행이 재난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였음.

2) 잘된 점

· 현장 확인 및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문까지 피의자 범죄사실 인정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피의자에게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에 일조하였음.

3) 어려운 점

· 위험물 불법운반용기는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여 한국검정공사와 공조수사가 필요함.

2.2.2 수사재지휘 사건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1항⁶⁾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⁷⁾ 위반)

가. 수사추진 현황

1) 사건의 발단 및 수사경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번지 소재 (주)○

○○○○○에서는 의약품 중간제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위험물 제 4류 제 1석유류(헥산) 200리터*27개=5400리터, 제 4류 알콜류(I.P.A) 200리터*15개=300리터를 위험물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 취급하다 2010년 3월 30일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현장조사 중 사법경찰관 소방경 황운석외 1인에게 적발되어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

2) 수사결과

·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번지 소재 (주)○○○○○○ 공장장 ○○○를 신문 조사한 바 제1피의자(공장장), 제2피의자 (주)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반 범증이 충분하므로 본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함.

3) 수사재지휘 내용

· 저장물품이 위험물인지 성분검사가 누락된 점: 재지휘 (2010.9.3.)

(위험물 안전관리법 대통령령에 의한 위험물에 대한 판단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한 물질명과 인화점을 확인하여 위험물로 판정된 경우에는 소방서 별도의 위험물 성분 분석이 필요치 않음)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물질명은 노말 헥사인(헥사)은 성분 및 인화점(-22)을 확인결과 제 4류 제1석유류 위험물이며, 물질명 아소프로필알콜(I.P.A)은 제 4류 알콜류 위험물임)

· 위험물 허가서 및 비교사진 누락되어 확인불가: 재지휘

· 위험물 처분여부 및 근거자료 제출 : 재지휘

4) 수사결과

· 참고인 진술 및 제반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범증이 충분하므로 기소 재의견

나. 사건 수사추진 일정

- 2010. 3. 30. : 화재발생 및 현장확인
- 2010. 3. 30. : ○○○○○○(주) 공장장 ○○○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자인(확인)서 징구
- 2010. 4. 01. : 소방관계법령위반 사실적발보고서 작성
- 2010. 4. 19. : 무허가위험물 현지확인결과보고서 작성
- 2010. 7. 26. : 피의자 ○○○에 대한 신문
- 2010. 7. 28. : 피의자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단원경찰서)
- 2010. 8. 23. : 수사결과보고서
- 2010. 8. 24. : 사건송치 의견서 작성(특별사법경찰관 황운석)
- 2010. 8. 24. :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사건송치
- 2010. 9. 03. : 수사재지휘(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 2010. 9. 17. : 수사재지휘에 따른 보강수사 자료제출, 참고인진술조서(위험물안전관리자 안지찬), 물질안전자료

6)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7)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및 위험물제조소등설치허가증, 거래명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발췌 제출
- 2010. 9. 29. : 사건송치 재의견서 작성(특별사법경찰관 황운석)
- 2010. 9. 29.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사건 송치

다. 수사결과와 분석 · 평가

1) 총평

· 화재위험성이 있는 알콜류(IPA)와 독성이 강하여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신경, 호흡기, 소화기 등 각종 장기 다발성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제4류 제1석유류(헥산)은 위험한 물질로 화재수사시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적발 수사하여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음.

2) 잘된 점

· 화재 발생과 동시에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수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장 증거물의 확보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자인 받아 수사를 처리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음.

3) 어려운 점

· 안산소방서 관내(반월공단, 시화공단)에 위험물 취급업체가 무수히 많은데 비해 이를 단속하는 소방인력이 부족하여 불법 위험물에 대한 조기 수사 및 검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여러 통계자료와 조사된 몇 가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이 소극적인 것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전문성과 관심부족 문제 및 고질적인 인력난 등이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2절 자료에서 분석된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에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3.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현실태 및 문제점

3.1.1 특별사법경찰 교육의 문제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소방특경사 교육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행 특경사 실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보면 교육생의 소방경력, 나이, 학력, 특경사 경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교육수준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검찰청,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는 특사경 실무경험이 많거나 형법 관계법령 등에 능통한 전문 교육생이 있는 반면, 근무경력 짧고 관계법령에 능통하지 못한 교육생도 있어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둘째, 강의 내용 또한 실습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이론교육을 주로 실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 아직 교육환경 등이 미흡한 수준으로 교육의 효과성이 의심된다.

셋째, 검찰청 교육이 1년에 1회 이상 특사경 교육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내용 및 시간, 인원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형식적이다. 일선소방서 및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특사경 교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 또는 법원연수원의 1년에 1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며, 이나마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다.

3.1.2 공조수사체제의 미흡

공조수사는 수사기관 상호간의 자료를 수집하고 수배, 통보, 조회 또는 합동수사를 함으로써 범인, 여죄, 범인경력, 신원 불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소방사범(피의자)을 검거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사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공조수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조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조직 내에 공조수사가 미흡한 이유는 타 관서 발생사건에 대한 무관심이 작용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사소방사범에 대한 현황분석 및 범죄분석이 체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직외적으로도 수사기관과 소방서간의 공조수사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조수사가 미흡한 실정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소방서 중심의 조사체계 하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인력을 파견 받더라도 그들이 일할 공간조차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경찰이 검찰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소방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공조수사가 미흡한 이유는 소방에서 개별기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으려는 적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3.1.3 수사전문성의 문제점

일선 소방서의 특성상 담당직원이 단기적, 획일적 순환배치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화재조사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이중적 역할로 수사업무 소홀 가능성이 존재해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기본적으로 경찰에 비해 일반적 수사업무에 대한 경험이 다소 부족하여 수사기법이 미흡하여, 특히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행하야 할 긴급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강제수사의 경우 소방사범 처리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3.1.4 현행수사활동의 실태

현행 법률상 소방사범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는 검찰(검사)과 소방관서(특별사법경찰관)가 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의 증거 판단과 법령의 해석 · 적용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건처리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재량을 검찰이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수사사무보고와 형사소송법 제 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가 범죄수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와 제53조 등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거나 보조를 해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사법경찰관리 사이에 사전 검토를 위한 의사소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지나친 명령과 지휘는 수사의 효율성 저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소방사범의 수사권 활동에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3.2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개선방안

3.2.1 특별사법경찰 수사교육의 개선안

전문화 교육은 소방이 시대변화와 소방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방법, 교수, 교육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특경사 수사교육의 전문화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소방 조직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첫째, 수사교육과정의 체계성 확립을 위해서 교육대상인원만을 파악하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수요조사와 일반적인 차출형식의 의무교육을 탈피하고, 직원들의 수행업무능력(실무경험, 경력, 학력, 전공 등)과 개인적 교육수요에 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요조사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둘째, 신개념 전문수사과에서 수사 전반에 대해 검찰청의 일회성,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전문수사관의 수사실무와 수사사례를 통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전통적 교육의 보완책으로 경기소방학교 사이버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방법의 변화와 교육기회의 폭을 넓혀 수사전문 사이버교육의 내실화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사이버 교육상의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하여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전문가나 학계, 기타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수사 연구결과나 기법 등이 활용되도록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3.2.2 공조수사체제 확립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조수사체제의 확립은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 현재 공조수사체제에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조수사체제를 구성할 때 소방조직 내 사법담당자들만 활용하지 말고, 기동화,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의 현실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지식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개별기관으로부터 필요인력 전문가(건축전문가, 위험물전문가, 가스·전기전문가) 등을 협조 받아 공조수사를 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또한, 조직외적인 공조수사체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을 경찰청(서) 및 검찰청·지청(형사2부:수사관)으로 정기적 파견근무를 통해 각 기관의 업무를 익히게 하면, 그들의 경험과 시야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향후 상호기관에 공조

체제를 유기적으로 엮어주는 매개역할을 하여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수사작용의 실질적 수행에 있어서도 특수성 유관기관 등과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피의자 파악 및 신병에 관한 자료를 일부 검찰과 경찰 등에 한정되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까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범죄정보 및 사법경찰작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범죄사실 조회 및 주민조회에 대한 정보공유 제도가 필요하다.

공조수사체제는 중요사건(화재포함)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해결을 위하여 전문화는 물론, 검찰을 포함한 유관기관 사이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자료, 정보의 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조수사 확립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각 개별법에 따른 수사기관별 공조수사 관련 규칙이나, 예규 등 법률적 근거를 통해 공조수사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3.2.3 신개념 전문수사과 신설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청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본부에서는 현재 사법담당자의 업무를 통합운영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방조직 내 사법고시 출신자를 전문수사과 운영기획관으로 하고, 과 산하 팀제 운영으로 각 소방서별 수사업무 조정 및 지원을 담당하는 특사경 전문수사과의 신설이 절실하다. 본부의 전담수사과는 신개념의 전문수사팀으로 소방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수사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전문 수사과의 역할

- ① 법령연구 및 수사기법개발을 하여 수사지원업무 강화
- ② 별도의 사법조사실을 운영
- ③ 각 소방서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지도 및 감독
- ④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지도
- ⑤ 소방사범의 사안별 사례분석을 통한 특사경 전문적 교육 및 연구,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의 경우 수사절차상의 전문교육실시, 수사실무집, 수사사례집 발간작성 보급(현재 화재조사사례집은 소방재청에서 편찬하고 이를 기초로 화재조사 업무에 참고하고 있음).

⑥ 검찰 및 경찰의 수사업무의 공조

전문지식과 탁월한 수사능력을 가진 전문수사관을 배치하여 수사지원과 교육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문수사팀 제도를 명문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전문 수사팀의 전문 수사관은 단기적으로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및 본부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3.2.4 직무범위의 확대 및 수사권 현실화

소방법과 관련된 사법경찰관 업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사범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업무범위에 관한법률」 제6조 제10호의 소방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표 5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표 5. 소방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5조 제14호에 계기한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내에서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범죄	제5조 제14호에 계기한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내에서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및 형법 제164조에서 제176조에 규정된 범죄 ⁹⁾	소방기관에서도 형법 제 164조에서 제176조에 규정된 소방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소방범죄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제5조 제14호: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을 통하여 검찰과 소방간의 상명하복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검사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는 헌법상 상호분립정신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행정조직의 구성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 즉 어느 한 기관이 일방적으로 타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양자 간의 견제, 균형과 긴밀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관계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개정의 취지는 소방사법에 관련된 주체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와 직무범위확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며, 법 개정을 통해 소방의 주체성을 인정하여 책임감 있게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은 명령, 지휘에서 벗어나 공소수행을 위한 보완 수사에 주력하게 되어 수사와 공소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되는데 목적이 있다.

4. 결 론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광역지방단체 기관들이 특별사법경찰제의 직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방조직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특사경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사권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살펴본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앞서의 장들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이론과 우리 안산소방서의 검찰 송치건의 수범사례(내사종결, 건물관리권 법적분쟁, 불법위험물 대형운반용기 적발, 수사 재지휘)와 특사경제도의 현 실태 및 문제점들을 논하고, 수사교육의 내실화 및 직무범위의 확대와 법률이 개정을 통해 수사권 강화방안을 제시하였고, 본부차원의 고경화된 전문 수사과를 신설하고, 공조수사 체제를 확립하여 특별

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현재 특사경제도는 다수의 행정기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직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개별 행정기관의 특사경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수사의 전문성, 신속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와 법률의 개정은 소방조직의 역량강화에 효과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소방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방서장도 경찰서장에게 부여되는 즉결심판제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수사종결권도 인정된다면 조직의 역량강화는 물론 소방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방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소방조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 논문이 비록 부족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소방사범 수범사례들이 한곳에 모여 수사사례집 발간에 초석이 되길 바라며, 수사실무를 담당할 후배 소방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2009)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이재상 (2009)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김희옥 (2008) 특별사법경찰관리,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제197호
 민형동 (2008) 특별사법경찰의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0호.
 2009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소방방재청

- ◎ 논문투고일 : 2012년 04월 16일
 ◎ 심사의뢰일 : 2012년 04월 17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05월 18일

9)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제168조 (연소), 제169조 (진화방해), 제170조 (실화),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5조 (예비, 음모),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